

공정위, 삼성 협력사 상생협약... 하도급 거래구조 개선

1·2·3차 협력사 6700여곳 혜택
3.5조 금융지원·5조 사회환원 연계
에너지비·인건비 선제적 대금 연동

삼성 그룹의 상생협력 혜택이 영세한 2차 이하 하위 협력사까지 원활하게 확산 되도록 물길을 트는 대규모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 그룹 12개 계열사와 1·2·3차 협력사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 1차 협력사에만 머무는 한계를 넘어, 거래망에 속한 2·3차 중소 협력사까지 선순환되도록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삼성 거래망에 속한 약 6700여 개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 10일 이내 대금 지급... 1·2차 협력사도 하위 거래처 조건 개선 동참
상생협약의 핵심은 중소 협력사의 유동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위

성 확보를 위한 대금 지급 조건의 획기적 개선이다.

우선 삼성은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법상 기준(60일)보다 대폭 단축한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현금성 결제 및 상생결제시스템 기반 대금 지급 원칙을 유지하고 명절 대금도 조기 지급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원사업자가 발주처에 대금 청구 시 입

력한 대금 지급 기한에 맞춰 대금이 자동으로 수급사업자와 하위 협력사에게 이체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삼성의 이 같은 조치에 발맞춰 1·2차 협력사들도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기한을 마감 후 30일 이내 등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삼성은 하위 협력사의 대금 조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동참 기업에 협력사 종합평가 가점 부여, 상생펀드 지원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 3.5조 원 펀드 가동 및 5조 원 사회 환원 약속 이행

아울러 삼성은 기존 1차 협력사 중심의 지원책을 2·3차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총 3.5조 원 규모의 상생펀드 및 ESG 펀드를 통해 협력사의 시설투자 및 ESG 전환 금융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지난 5월 발표한 '5조 원 규모 사회 환원 약속' 중 '2·3차 협력사 지원 및 산업재해기금 조성·운영' 내용을 이번 협약에 포함했다.

특히 현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 의무 대상이 아닌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변동분까지 선제적으로 대금에 연동해 반영기로 하는 한편, 2·3차 협력사 대상 환경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삼성은 이번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 협약에도 반영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준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며 "착취적 관행을 뿌리 뽑는 강력한 제도 개혁도 필요하지만, 이런 개혁이 순항하려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의 새로운 규범을 확산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삼성의 상생노력이 협력사의 상생노력으로 막힘없이 이어져 대기업의 성과가 그 협력망의 상위뿐만 아니라 하위 협력업체의 성과로도 공정하게 분배되는 건강한 기업생태계의 큰 숲이 자리잡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공정위 역시 삼성과 협력사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고용부, AI로 취업확률 분석·채용 지원

'AI 고용서비스' 3종 시범 운영
자격증 취득 등 전 과정 코칭

인공지능(AI)이 구직자의 역량을 분석해 취업 확률을 알려주고, 맞춤형 직업훈련과 자격증을 추천해 주는 스마트한 고용서비스가 도입된다. 구인 기업 역시 AI를 통해 채용 조건 피드백과 인재 추천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를 통해 구직자·구인기업·행정 직원을 위한 신규 AI 고용서비스 3종을 3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편의성과 답변 품질을 최적화한 뒤 오는 8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구직자용 '취업확률 기반 구직컨설팅'은 희망 직종의 취업 성공 가능성을 진단하고 자기소개서, 이력서, 직업훈련 등의 보완점을 짚어준다. 구직자가 역량 부족으로 취업확률이 낮게 나오면 'AI 직업훈련 추천'과 'AI 일자리 추천' 서비스가 연계돼 자격증 취득부터 최종 채용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방식이다.

구인 기업을 위한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은 노동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임금이나 근로형태 등 채용조건 조정안을 제안한다. 또한 키워드 입력만으로 상세한 구인공고 초안을 작성해 주는 '구인공고 AI 작성 지원'과 추천 사유·이력서 요약 정보를 함께 제공

하는 'AI 인재추천' 서비스도 제공된다. 고용센터에서 구인공고 인증 업무를 하는 행정직원은 'AI 구인공고 검증'을 통해 성·연령 차별이나 최저임금 미달 등 구인공고 내 법 위반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AI 기반 고용서비스는 구직자에게는 맞춤형 취업 경로를,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연결해 주는 스마트한 취업과 채용 파트너가 되어 줄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8월 취업활동계획 수립지원, 12월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행정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AI 농업 생태계 구축 나선다

농업·농촌 AX로 소득 창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의 인공지능 대전환(AI)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국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AX데이터로 연결되는 모두의 AI 농업·농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충분한 AX 데이터 수집 및 연계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통한 데이터 가치화 ▲모두가 활용 가능한 서비스 체계 구축 ▲데이터 선순환을 위한 조직·제도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5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농업인이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I)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이고, 우수한 현장

데이터가 가치평가와 거래를 거쳐 농업인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업·농촌 현장과 기관 곳곳에 흩어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파악·연결하고, 현장에서 자동으로 축적되는 구조를 만든다.

아울러 농업·농촌 AX데이터의 전주기를 관리하는 표준을 마련하고, 품질관리를 통한 데이터 가치화를 추진한다. AI 친화적 데이터 개방과 윈윈 플랫폼, 안전한 거래체계 및 AX데이터 허브 구축으로 데이터 활용·거래 선순환 기반도 마련한다.

또 농업·농촌 AX데이터 전략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핵심 거점인 '농업·농촌 AX데이터 허브' 구축도 검토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반도체 효과에 지역 경제 '양극화' 뚜렷

데이터처 '2026년 1분기 GRDP'

지난 1분기 전국적으로 3%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지역 간 편차는 꽤 크게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GDP는 전년 동분기에 비해 3.8%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1.5%)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국내 5대 권역 성장률이 모두 상승했다. 하지만 지역별 격차가 확대됐다.

권역별 GRDP 성장률은 수도권(2.5→5.2%)과 충청권(1.3→4.2%)에서 가장 높았다. 대경권(0.4→2.3%)과 동남권(0.5→2.0%)은 2% 대의 성장세를 보였다. 호남권(-0.2→0.0%)은 5대 권역 중 성장률이 가장 낮았다.

성장 격차가 컸던 핵심 요인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수도권과

충청권은 광업·제조업 성장률이 각각 12.1%와 5.4%에 달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서비스업 성장률도 3.8%와 3.4%로 1~2위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석유·화학, 선박 중심 등의 비중이 높은 호남권의 경우 광업·제조업 성장률(0.1%)이 5대 권역 중 가장 낮았다. 호남권과 마찬가지로 석유·화학, 선박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동남권도 광업·제조업 성장률(0.9%)이 부진했다.

대경권의 경우 지역 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생산 호조로 광업·제조업 성장률(7.4%)은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대구 지역 주택 미분양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해 건설업 성장률(-11.1%)이 5대 권역 중 가장 낮았다.

시도별 GRDP 성장률도 산업 구조에 따라 큰 격차를 나타냈다.

17개 시도 중 1분기 GRDP 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13.8%)이었다. 이

어 경기(6.2%), 서울(4.8%), 울산(4.4%) 순이었다.

충북의 경우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입어 광업·제조업 성장률(25.8%)이 가장 높았다. 경기의 광업·제조업 성장률도 14.2%에 달했다.

반면 전남(-0.8%)과 충남(-0.5%)은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남은 지역 원전이 정지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기타(전기·가스) 부문 성장률이 -8.8%를 나타냈다. 충남은 광업·제조업(-4.1%)과 건설업(-7.2%)이 크게 부진했다.

또 세종(3.2%), 대구(2.4%), 경북(2.3%), 제주(1.7%), 인천(1.6%), 부산(1.5%), 경남(0.9%), 전북(0.9%), 광주(0.2%), 강원(0.0%) 등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각 지역마다 산업 구조에 차이가 있는데 1분기 3.8%의 성장률을 설명하는 유일한 단어는 반도체였다"며 "반도체 공장이 있으나 없느냐에 따라 성장세가 갈리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설명회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신항 배후단지 투자유치 시동

설명회 열고 공급계획 등 소개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개시했다.

공사는 지난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6 BIFEZ 국내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가 갖추게 될 경쟁력 및 남 컨테이너 배후단지 공급 계획 등을 소개했다.

공사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가 가진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서의 입지 경쟁력과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연계성, ▲항만 인프라 기반의 복합물류 비즈니스 환경 등을 소개했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는 항만과 배후물류 단지가 연계된 복합물류 거점이다. 부산항만공사는 글로벌 물류기업이 이미 진출한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의 동북아 물류거점 구축에 최적화된 투자처임을 강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